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18일째... 野 “119 불러 중단 설득”

김기현 “이 대표 건강 회복하면 대표회담 열고 민생 논의할 것”

박성준 “與, 단식 두고 조롱·비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정부 처음”

檢, 다음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의 단식중단 촉구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계로 치닫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에게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의원들, 지지자의 걱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 의료진 소견이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치명적 건강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도 당 대표실 앞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한 의총에서 ▲민주당의 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 돌입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대응 및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 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

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데도 즉시 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며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 검찰이 다음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

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일촉즉발’ 상태로 번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18일째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119 구급대를 호출하며 이 대표를 설득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긴급하게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긴급 입원을 해야 한다고 당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 몇 분들이 이 대표를 설득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못하고 단식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검토에 ‘밀실야합’ 반발

의석 확보에 약 6% 득표율 필요 정의당·진보정당 규탄 나서 민주당 “촛불 전 선거제도 퇴행”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시스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

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

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

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실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324대 안전 부적합

전국 8301대 특별점검 부품 교체·현장 조치 나서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

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하 기자 pathfinder@

與,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후보 김태우 선출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사무총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과 경선에 참여한 김진선 국민의힘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 예비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만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 공관위는 강서구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만의 선택으로 전략적으로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검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된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박정하 기자